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3909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7330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3. 9.경부터 2008. 11.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 대해 8건의 주민세(종합소득)를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위 주민세 일부를 분할 납부하고 남은 체납세액은 2023. 11.경 기준 25,544,840원(가산금 포함)이다.

연번	부과년월	과세번호	과세내역	부과액	가산금	합계	최초납기일	분할납부액 (‘16.3~’20.7)	현 체납액
총계				27,389,790	20,693,470	48,083,260		22,538,420	25,544,840
1	2003.09	B	주민세(종합소득) 2003.5월 확정신고분 (2002귀속5)	731,610	528,510	1,260,120	2003.9.30.	1,038,420	221,700
2	2004.02	C	주민세(종합소득) 2003.11월 수정신고	1,013,610	768,120	1,781,730	2004.2.29.	1,500,000	281,730
3	2004.07	D	주민세(종합소득) 2004.5월 결정 (2002귀속)	1,641,960	1,244,390	2,886,350	2004.7.31.	2,000,000	886,350
4	2004.12	E	주민세(종합소득) 2004.9월 종합소득세 (2003귀속)	878,450	665,780	1,544,230	2004.12.31.	0	1,544,230
5	2005.02	F	주민세(종합소득) 2004.5월 종합소득세경정 (주민세 과소, 추가고지)	13,764,050	10,432,640	24,196,690	2005.2.28.	16,500,000	7,196,690
		G							500,000
6	2005.02	H	주민세(종합소득) 2005.1월 종합소득 (2002년)	6,420,120	4,866,440	11,286,560	2005.2.28.	1,500,000	9,786,560
7	2008.11	I	주민세(종합소득)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70	710	24,580	2008.11.30.	0	24,580
8	2008.11	J	주민세(종합소득)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6,120	2,186,880	5,103,000	2008.11.30.	0	5,103,000

나. 피고의 위임을 받은 ○○시 ○○구청장은 위 지방세 채권(이하 '이 사건 지방세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① 2010. 3. 10. 원



고가 O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 관련 채권(같은 목록 순번1)을, ② 2014. 1. 22. 원고가 T은행, S은행, R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각 예금채권(같은 목록 순번2 내지 4)을, ③ 2014. 7. 10. 원고가 V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같은 목록 순번5)을 각 압류하였고(이하 각 압류처분을 별지1 목록 순번에 따라 '제○ 압류처분'이라 하고,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각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¹⁾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으로서,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도 없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처분이 유효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79누65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1) 2023. 11. 10.자 피고 답변서 제9면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제2 내지 4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위임을 받은 ○○시 ○○구청장은 2014. 3. 24. 제2 내지 4 압류처분을 해제하였고, 그에 대한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직권으로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가 된다면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게 되는바, 이 사건 지방세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2 내지 4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1 압류처분이 무효가 아니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제2 내지 4 압류처분의 무효여부는 이 사건 지방세 채권의



시효완성 여부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1, 5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²⁾

가. 제1 압류처분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 압류처분은 원고와 O 사이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회 보험료 50,000원만 납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보험계약이 해제되었는바, 그 해약환급금은 원고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제1 압류처분은 압류금지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153조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3호는 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2.경 O과 보

2)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험계약을 체결하여 'P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으나, 1회 보험료인 50,000원만 납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보험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O 사이의 위 보험계약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제1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제1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위 보험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O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인바, 이는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보이기 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해약환급금 채권이 원고의 '생계유 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 압류처분이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명 위 해약환급금 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제1 압류처분에 압 류금지재산을 압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³⁾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5 압류처분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 내지 제4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지방 세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바, 이 사건 지방세 채권의 가장 늦은 납기일 인 2008. 11. 3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1. 30.에 위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5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3) 또한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 하게 하는 소멸시효 중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 여부와 무관하게 제1 압류처분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제1 압류처분이 유효한 이상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일인 2010. 3. 10.부터 지속되므로,⁴⁾ 제5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2014. 7. 10.에도 이 사건 지방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제 5 압류처분은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지방세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제1, 5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결손처분(지방세징수법이 2022. 1. 28. 법률 제18794호로 개정되면서, '정리보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더러,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채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채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결손처분 취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 5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⁵⁾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세관청이 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압

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 압류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하고 현재까지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구 지방세징수법(2022. 1. 28. 법률 제18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항에 규정된 결손처분 취소 시 납세자에 대한 통지의무 조항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류를 소급해제한 후 다시 압류한 것과 ② 국세를 체납하여 압류한 재산을 20년 넘게 방치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갑 제13호증, 가지번호 포함), 위 사례와 유사한 제1, 5 압류처분은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⁶⁾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위 사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고,⁷⁾ 그 밖에 제1, 5 압류처분이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 내지 4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

판사 나 ○

판사 송○○

6) 이 사건 소장 제9면 등

7) 위 ①사례는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동일한 보험금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해제한 후 재차 압류한 경우이고, 위 ②사례는 압류를 20년 넘게 유지한 경우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0

별지1

목록

순번	압류번호	압류물건	압류설정일	압류해제일
1	W	[Q P보험]예금(O	2010. 3. 10.	
2	X	[T은행] 예금	2014. 1. 22.	2014. 3. 24.
3	Y	[S은행] 예금	2014. 1. 22.	2014. 3. 24.
4	Z	[R은행] 예금	2014. 1. 22.	2014. 3. 24.
5	AA	[V] 예금	2014. 7. 10.	



별지2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節에서 “地方稅徵收權”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30조의6 (시효의 중단 및 정지)

-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③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끝.